

문화방송 노보

무단협 1498일째
타임오프해지 430일째
지명파업 325일째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2월 23일, MBC '분노의 날'

공정방송, 우리 모두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7년이다. 청와대에서 '조인트' 맞고 김재철 사장이 MBC 장악을 위해 파견된 이후, MBC는 처절하게 추락을 거듭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하에서 공영방송 MBC는 소수 권력자의 전리품으로 전락했다. 그 배후에 바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있다.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해 현방문진 여권추천이사 6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극우파 운동가들이다.

이들이 다시 임기 2020년까지인 새 MBC 사장을 뽑겠다고 나섰다. 이는 탄핵에 직면한 박근혜 체제를 3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현 경영진은 노동조합 탄압을 조사하는 국회 청문회 개최에 반발해, 증인으로 채택된 당사자임에도 뉴스로 감정적 배설을 쏟아내고 있다. 특정 정치세력의 방송장악을 막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왜곡비난하고 있다. 저널리즘에 대한 모독이다. 이미 100명이 넘는 현업 구성원들을 쫓아내놓고, 다시 줄속으로 밀실에서 대규모 경력사원 채용을 강행하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분명하다.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진 박근혜 체제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이 설사가 결정되더라도 MBC만큼은 극소수 극우세력의 마지막 저항 기지로 삼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야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감출수 있기 때문이다.

폭력이 강요하는 침묵은 일시적일 수는 있어도 영원할 수는 없다. 이제 우리는 행동한다. 7년간의 긴 싸움을 이제 끝내야 한다.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한다. MBC 구성원들은 언론자유를 규정한 헌법 21조와 방송법에 따라, 공영방송 중사자로서 언론자유 회복과 공정방송의 의무를 부여받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그 의무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내일(23일)은 '분노의 날'이다. 공정방송에 우리 모두의 이름을 걸었다.

함께 모여 저항합니다!

■ 23일

13시 여의도 방문진 앞 규탄 집회

-언론노조 주최, MBC본부 전 조합원 집결

18시30분 상암동 MBC 광장 촛불집회

- '아바타 퍼포먼스' (광장에 전 조합원의 상징물 설치)

- 전 조합원 집결 · '공정방송' 지지 촛불 시민 결함

■ 24일 - 신임 사장 첫 출근

■ 27일 - 본사 임원 선임

■ 3월 2~3일 - 관계회사 주주총회

차기 사장 후보 3인 왜 자격 미달인가

지난 1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사장에 공모한 14명의 후보 가운데 최종후보자 3명을 압축했다. 권재홍 부사장, 김장겸 보도본부장, 문철호 부산MBC 사장이다. 3명의 후보들 면면은 왜 방문진에게 사장 선임 자격이 없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들 3명은 오늘날 MBC를 처참하게 추락시킨 장본인들이다. 이들이 과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인물들일까? 3명의 후보를 분석했다.

권재홍



‘허리우드 액션’ 빈축... 징계·부당전보 등 ‘인사 폭거’ 총지휘

김재철·안광한 체제를 거치는 동안 권재홍 부사장은 <뉴스데스크> 앵커와 보도본부장, 부사장으로 승승장구했다. 파업 과정과 이후 보도 부문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와 무더기 징계, 대규모 부당전보를 사실상 주도했다. 회사 인사위원장 역할을 겸하는 부사장에 오른 이후에도 인사평가 최하 점수 강제 할당과 강제 교육, 징계, 부당전보 등을 수시로 자행하

며 조직파괴에 앞장섰다.

보도본부장이자 앵커로 일하던 2012년 5월에는 파업 중이던 노동조합원들이 자신의 허리 등에 ‘물리적 충격’을 입혔다며 병원까지 찾았고, 뉴스 진행에서도 중도하차했다. 뉴스데스크는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화면이 공개되자 그는 ‘정신적 충격’에 의한 두통 증세였

다고 말을 바꾸었다. 블랙코미디 ‘권재홍 허리우드 액션’ 사건이었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반론보도 판결을 확정했다. 4년만인 2016년 3월 11일 <뉴스데스크>는 톱 기사로 반론보도문을 방송했다.

문철호



‘170일 파업’ 부른 불공정보도 이끌어 MBC기자회사 제명

문철호 부산MBC 사장은 2011년 보도국장으로 불공정 보도를 일선에서 지휘했다. 2012년 1월 기자회견의 제작거부와 노동조합의 170일 파업을 촉발시킨 직접적 책임자이다. 당시 그는 공정보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요구를 시종 묵살하고, 위로 아래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그는 편파, 불공정 보도라는 비판에 직면할 때마다 “정치부장(김장겸 현 보도

본부장)과 사회2부장(박용찬 현 시사제작국장)이 자기 말을 잘 안 듣는다”는 핑계부터 댔다. 그러다 기자들의 퇴진 요구와 제작 거부가 시작되자 “징계를 밀어붙이랴”는 김재철 당시 사장의 강경대응 주문을 충실히 수행했다. 보도국장으로서는 뿐만 아니라, 선배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감과 애정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이진숙 당시 홍보국장(현 대전

MBC 사장)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MBC 기자협회에서 제명되기도 했다.

그는 보도국장에서 물러난 뒤 후배 기자들이 해고와 징계 등의 징계를 당한 상황에서, 김재철 사장이 급조해 베푼 베이징 지사장 자리로 영전했다. 그리고 2014년 김재철 체제를 계승한 안광한 체제 개막과 함께 부산MBC 사장에 올랐다.

김장겸



‘축소·은폐·왜곡...’ MBC뉴스 파탄의 총책

김장겸 보도본부장은 2011년 이후 MBC 뉴스 파탄의 주역이자 총책임자이다. 김재철 사장 취임 직후 정치부장으로 임명돼 각종 정치 이슈와 선거 관련 보도를 편파적으로 지휘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여야간 공방으로 다루고, 청와대 해명 전달에 급급하며 의혹을 축소했다. 한미 FTA 반대 집회 보도를 누락하고, 장관 인사청문회 의혹은 축소했으며,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119 통화 논란’에는 눈을 감았다.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논문 표절 의혹’을 아무런 검증 없이 날조해 보도한 사례는 MBC 선거보도 사상 기념비적인 대형 오

보로 기록됐다.

2013년 5월 보도국장에 임명된 뒤에는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을 철저히 누락했다. 구속기소된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기본적인 스트레이트 기사조차 다루지 않았다. 자신이 직접 지시한 기획 리포트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변호사를 검직하고 있다’는 대형 오보를 내고 망신을 자초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보도 당시 편집회의에서 사고 실종자 가족들을 향해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장겸 보도국장 체제에서 현직 기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 MBC

뉴스는 ‘영향력 0.7%, 신뢰도 0.5%’의 참담한 오명을 뒤집어썼다.

2015년 2월 보도본부장 선임 뒤에는 메인뉴스를 ‘청와대스크’로 전략시켰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축소·은폐·지연·받아쓰기 보도로 일관했다. 이른바 ‘태블릿PC 증거능력’에 대한 의혹 제기를 끈질기게 시도해 빈축을 샀다. 최근에는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된 국회의 ‘MBC 노조탄압 청문회’ 개최 결정에 대해 감정적으로 비난보도를 쏟아내며 ‘뉴스사유화’의 절정을 선보였다.

뉴스 사유화, 누가 지시했나?

김장겸 · 최기화 등의 방패로 전략한 <뉴스데스크>

방송문화진흥회가 사장 선임을 강행하는 최근, 현 경영진이자 차기 사장 후보들을 보위하기 위한 전파 사유화와 왜곡 보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에 대한 고발과, MBC 경영진의 부당 노동행위 전반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하루가 지난 14일 <뉴스데스크>는 정치부와 문화부 기자들을 동원해 이 안건들을 통과시킨 야당을 비난하는 기사를 무려 5개나 리포트했다. 리포트를 한 기자들은 모두 2012년 파업 이후 채용돼, 쫓겨난 기자들의 빈자리에 투입된 인력들이었다.

박광은 의원에게도 “문재인 전 대표 비서실장에 이어 캠프 대변인까지 맡았다”는 수식어를 덧붙였다. 이날을 시작으로 야당 의원들과 유력 대선후보의 이미 알려진 과거를 들추는 편파적인 리포트가 줄을 이었다. 정치부에서는 기사가 편파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기자를 욕박시키고 리포터를 바꾸는 일까지 벌어졌다.

방송법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공정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역시 방송이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문제의 리포트들은 청문회의 당사자인 경영진 스스로의 이해가 걸려 있는 기사들이었다. 냉정과 공정을 유지해야 할 저널리즘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흥분해 날뛴 꼴이었다. 특히 마지막 리포트는 야에 사측의 성명을 그대로 내보냈다. 공공재인 전파를 경영진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쓰는 행태는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 위반이다.

‘불법 정치파업’? 의도적 허위 보도

해당 기사들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②번 리포트와 ③번 리포트는 2012년 노조의 파업을 “불법 파업”, “불법 정치 파업”으로 지칭했다. 이는 명백한 왜곡이다. 불법성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MBC 경영진이 아니라 사법부이다. 2012년 파업과 관련해 회사와 노조, 조합원 사이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명백한 합법이라고 일관되게 판결했다. 해고 무효 확인, 업무 방해, 손해배상 등 민·형사 가릴 것 없이 모든 재판에서 파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2015년 5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자.

“MBC는 방송법과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하고 구성원들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인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 MBC 근로자들은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방송의 자유 및 공정방송의 의무는 방송사업자인 MBC뿐 아니라 방송편성책임자 및 방송의 취재, 제작, 편성 등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송사업 종사자들인 MBC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함께 부여된 것이다.

노동조합은 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불법 파업”으로 왜곡 보도를 한 김지훈, 장재용 기자와 문호철 정치부장, 책임자인 최기화 국장에게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③번 기사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른바 ‘방송장악 저지법’에 대해 “공영방송의 이사 정수를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으로 바꾸자는 게 핵심”이라면서 이를 “KBS와 MBC같은 공영방송을 사실상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구성이 현재 ‘여6야3’으로 편중돼 있다는 사실은 쏙 빼놓았다. 박근혜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에서 드러났듯 이미 ‘대3’ 구조의 폐해는 뚫을 대로 뚫아터졌다. ‘여7야6’으로 바뀌 편중을 완화하자는 것이 어떻게 장악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사장 선임에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

는 ‘특별다수제’가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권의 언론 장악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것은 상식이다. 이를 무시하고 왜 ‘방송장악 저지법’이 언론 장악 의도를 갖고 있다는 궤변을 펼치면서,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스스로도 낫 뜨거웠던지 <뉴스데스크>는 사흘 뒤, 나름의 근거 보강(?)을 시도했다.

⑥번 기사는 “여야 7대6 구조에는 야당의 노골적인 개입 의도가 있으며, 특별다수제는 경영 표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슬쩍 말을 바꾸고 있다. 그러면서 의회의 이사 추천은 영국과 독일,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 형식으로 꾸미긴 했지만 내용과 순서는 회사가 올린 성명과 판박이였다.

경영 표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결국 특정 세력의 전횡이 통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성립 불가능한 모순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는 꼴이다. 더구나 이 논리대로라면 현재의 여야 ‘대3’ 이사진 구성은 정권의 노골적인 공영방송 개입을 열어놓는 장치이다.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해외 사례마저 왜곡과 누락이 있었다. 독일 공영방송 ZDF의 사장을 선임하는 텔레비전 위원회는 무려 77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뉴스데스크>의 주장과 달리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도 포함돼 있다. 정부와 주정부, 교육, 과학, 예술, 문화, 전국 사회 복지조합 등 각계각층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들어간다. 최대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정 세력에 위원회가 장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또한 독일과 일본의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송장악 저지법’과 마찬가지로 특별다수제가 적용된다.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해외 사례마저 왜곡과 누락이 있었다. 독일 공영방송 ZDF의 사장을 선임하는 텔레비전 위원회는 무려 77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뉴스데스크>의 주장과 달리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도 포함돼 있다. 정부와 주정부, 교육, 과학, 예술, 문화, 전국 사회 복지조합 등 각계각층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들어간다. 최대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정 세력에 위원회가 장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또한 독일과 일본의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송장악 저지법’과 마찬가지로 특별다수제가 적용된다.

‘고영태 녹취록’에 대한 감정적 집착

뉴스 파행은 ‘고영태 녹취록’ 보도로도 번지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탄핵기각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하는 것처럼 보인다. 보도국은 사회1부 법조 기자들을 동원해 연일 고영태와 측근들이 나누는 대화 녹취록을 들추며 몰타기를 하고 있다. 해당 녹취는 눈앞의 이익으로 몽친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이 얼마나 어이없는 수준에서 이뤄졌는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다. 특검 수사와 현재의 탄핵심판 과정, 그리고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것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공익 재단을 만드는 척 기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냈고, 일당이었던 고영태 등은 실무를 담당하 하수인이자 공모자라는 점이다. 심지어 이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관여한 정황까지 녹취록에서 드러났다. 이익을 쫓아 뭉쳐있다가 관계가 틀어지자 서로 물고 뜯는 집단이 박근혜 대통령이 활용한 비선의 실체이다.

이미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알고 있는 시청자들은 보도국의 의도와 달리 ‘고영태 녹취록’을 통해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의 지지분한 모습만 다시 확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 녹취는 탄핵심판의 핵심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직 두 공영방송 KBS와 MBC만이 마치 누군가의 지침을 받은 듯, 일제히 고영태 녹취록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뉴스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단체들은 “MBC를 응원하자, 오늘 고영태 특집이 방송된다”는 문자를 돌리고 있다. 저널리즘은 실종됐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극소수 극우 세력의 일방적 선전매체일 뿐이다.



5개 리포트 전체 시간은 앵커멘트를 포함해 10분에 육박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과 탄핵 심판 중인 헌법재판소 소식 등을 모두 합쳐도 리포트는 4개였다. 당일 주요 이슈들을 제치고, 만 하루가 지난 환노위의 소식을 가장 중요하고 길게 다룬 것이다.

해당 리포트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다른 세 야당 의원들이 남아 통과시킨 의결을 ‘날치기’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정작 청문회 개최 결정의 원인이 된 노조 탄압 내막은 누락했다. 청문회는 “공영방송 재갈 물리기”로, 언론 장악을 방지하지는 법률 개정안은 “언론 장악을 위한 전략”이라고 둔갑시켰다. 언론노조와 야3당이 모의했다는 근거 없는 매도도 이어졌다.

청문회 출석 당사자들의 전파 사유화

경영진과 보도국장은 명백히 전파를 사유화했다. 최기화 보도국장은 14일 오후 민주당을 공격할 것과 박광은 의원을 기사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하며 “친노 죄빨”이라는 비속어까지 썼다. 이 지시는 그대로 이행됐다. ①번 리포트는 백종문 본부장 고발을 제안한 강병원 의원에게 “문재인 게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③번 기사는 “문재인 전 대표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한 이후, 민주당이 더욱 일사불란하게 총력전으로 법개정에 나서고 있다”고 표현했다. ③번 기사의 앞부분은 ‘해직 언론인 복직 특별법’을 비난하면서 이 법안의 발의자인



■ ‘방송장악 저지법’ 어떤 내용 담겼나? ‘청와대 낙하산’ 막는 공영방송 독립의 최소 장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 개정안, ‘방송장악 저지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방송문화진흥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4개 법안이 여기에 해당된다. 핵심은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방식을 개선해, 대통령 등 정치권의 입김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MBC, KBS, EBS와 같은 공영방송 사장선임권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이하방문진) 등 해당감독기관, 이사회 구성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바꾼다는 뜻이다.

MBC와 관련된 개정안(방문진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다. 여당 추천 이사 6명, 야당 추천 이사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있는 현행 방문진 이사회를 여당 추천 이사 7명, 야당 추천 이사 6명으로 개편한다. 또 사장 선임의 경우,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3분의 2(13명 중 최소 9명 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게 된다. 여야 어느 특정 정파가 좌우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이다.

물론 ‘보다 강력한 제도 정비나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해야 현행 방문진의 적폐를 해소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게, 4년 전 19대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 소속 ‘여야’ 교수자문단의 결론이었다. 그때 이미 “방문진 여야 추천 이사 비율이 6대 3이고, 사장 선임은 재적이사 과반수로 결정하다 보니 여권이 선호하는 인물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문진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되, 여야 추천 비율을 7대 6으로 조정해 과도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사장 선임 같은 중대 안건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합의해야 하는 ‘특별 다수제’를 도입하자”는 결론이 나왔다. 4년 만에 다시, 이 법안이 기로에 섰다.

I 방문진 이사회 ‘여야 7:6’ 구성

앞서 설명한대로 현행 방문진 이사회는 이사장 포함 9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대통령 추천 이사 3명, 여당 추천 이사 3명으로 여권 추천 이사만 총 6명이고, 야당 추천 이사는 3명에 불과하다. 어떤 법 조항에도 이런 구성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치적 관행의 명목으로 유지되어 왔다.

이 구조에서는 여당 추천 이사 6명 중 5명만 ‘위로부터의 오더’에 따라 합의한다면, 늘 정권이 원하는 MBC 사장이 등장하게 된다. 정부 여당이 방문진 이사회를 자신의 호위대로 삼고, 코드가 맞는 사장을 투하해도 견제할 장치가 없다. 언론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을 대통령의 선한 의지에만 맡길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이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공영방송의 존립은 정권 교체기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MBC 방송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 여파가 MBC 내부에 그치지 않고 엄청난 사회적 손실과 비용 발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공정·중립 보도로 여론을 형성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공영 언론의 존재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불가결한 요소라는 진실을 새삼 일깨웠다. 특히 MBC의 반복적인 왜곡·축소보도와 시청자의 철저한 외면은, 이런 ‘진실’을 역설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공영방송이 본연의 기능만 수행했어도 무소불위 권력이나 특정 세력의 국정농단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MBC의 공정·중립 보도 기능이 살아있었다면? MBC가 한동안 구축했던, 권력 감시자의 역할을 온전하게 해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제 때 취재하고 바르게 보도했다면? 이런 질문만으로도 방송장악 저지법의 필요성은 더부각될 수밖에 없다.

I MBC 사장 추천위원회 신설

방문진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방문진의 MBC 사장 선임절차 전 단계로 사장추

천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차단하는 일종의 이중 장치 개념이다. MBC 사장추천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장 후보자들을 공개모집하는 기관이 된다. 역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 후보자들을 결정하고 이를 방문진 이사회에 통보한다. 개정안은 또 방문진 이사회 회의 속기록과 녹음 기록, 영상 녹화기록 등을 첨부한 회의록의 작성과 보존을 의무화해, 회의 공개 원칙을 보다 강화했다. 회의 비공개 사유도 제한했다. ‘개인? 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비공개를 허락 하도록 했다.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일삼는 현재의 방문진 이사회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I 외압 전화 · 정부 보도 하면 징역형

MBC 사장과 임원의 정치적 독립을 명확하게 하는 조항도 있다. 이사와 임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안팎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정치활동에도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청와대 인사가 보도 편성과 관련해 외압 전화를 하거나, 권력 핵심 인사 등의 청탁을 통해 이른바 ‘정부 보도’를 할 경우가 이 조항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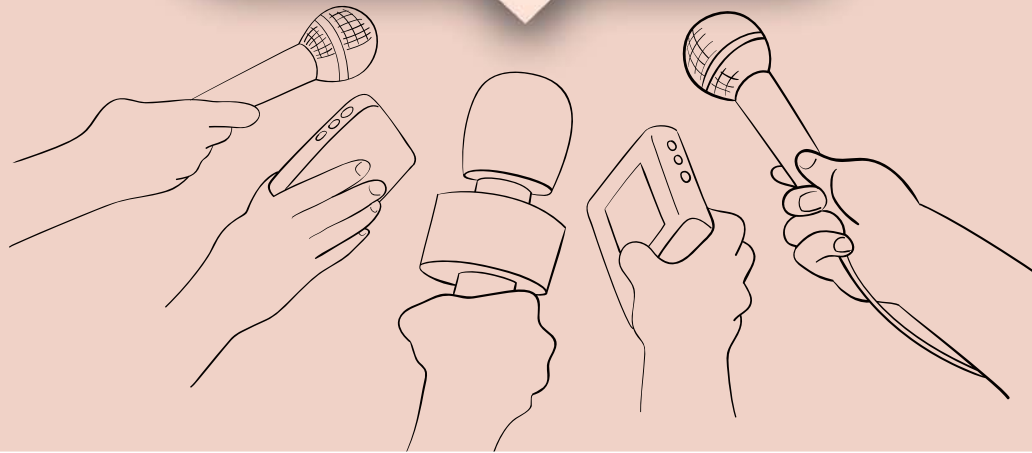
방문진법 개정안 등 방송장악 저지법은 지난해 7월 발의됐다. 당시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당 3당 의원 162명이 이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20대 국회 들어 최대 규모의 공동발의 법안이다. 그러나 이는 특정 정당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또 차기 대선출마를 발표하거나 시사한 문재인, 안희정, 유승민, 이재명, 남경필 후보 등 유력 예비후보들 모두 공언하고 공감했던 내용이다. 따라서 “정파와 무관하게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자”는 취지의 방송장악 저지법은 상식있는 사람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당연한 것’이 돼버렸다.

지난 10년 공영방송 MBC는 퇴보의 길을 걸었다. 알 권리와 여론 형성을 위한 공론장 역할을 해달라는 시청자의 요구와 반대로 정권 홍보와 여론 조작에 봉사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함께 반(反)헌법적 이데올로기와 권태의 연한 낙인찍기, 편가르기 확산에 나섰다. MBC가 공영방송이 아닌 공공의 흥기가 돼버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서라도, 재앙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사장 선임 방식 개선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

【표】 방송문화진흥회법 현행법과 개정안 주요 비교

현행	개정안
[방문진 이사진 구성] 여당 추천 이사 6명과 야당 추천 이사 6명 등 9명으로 구성	[방문진 이사진 구성] 여당 추천 이사 7명과 야당 추천 이사 6명 등 13명으로 구성
[사장 선임] 방문진 이사 9명 중 과반수(5명) 이상 찬성하면 사장 선임	[사장선임] 방문진 이사 13명 중 3분의 2 이상(9명) 찬성해야 사장 선임 (특별다수제)
(없음)	[사장추천위원회 신설] 15명 이내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사장 후보자를 공모한 뒤 역시 3분의 2 찬성을 통해 후보자들을 압축, 방문진에 통보.
(없음)	[회의 공개 강화] 방문진 회의 속기록과 녹음 기록,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 작성
(없음)	[정치적 독립 강화] 이사와 임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안팎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정치활동에도 관여할 수 없음.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방송장악저지법 처리 왜 진전 없나?



자유한국당 '버티기 꼼수'에 발목

I 국회 상임위서 7개월째 표류

언론장악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장악 저지법'이 발의된 것은 지난해 7월이다. 참여한 의원만 국회의원 전체의 과반인 162명에 달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정작 법안 처리를 위한 걸음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1월이 되어서야 겨우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을 정도이다.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중심에는 미방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이 있다. 개정안이 발의된 뒤 박대출 의원은 방송장악 저지법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커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었고, 신상진 위원장도 여야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리저리 발을 빼왔다. 야당 위원들의 7차례에 걸친 전체회의 개최 요구도 묵살해왔다.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간사가 서로 주거나 받거나 탁구를 하듯 시간을 지연시켜온 것이다.

I 야당 '안전조정위' 카드도 속수무책

이런 행태는 야당이 지난달 20일 '안전조정위원회'라는 카드를 꺼내든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안전조정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전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법에 규정된 협의체이다. 상임위 소속 의원수가 가장 많은 당에서 3명의 위원을 선임하는 등 모두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최대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안전조정위에서 조정안이 의결되면 30일 안에 상임위에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즉, 일단 구성만 되면 4개월 내에 상임위에서는 법안 처리를 해야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소수당으로 전략한 자유한국당이 아예 안전조정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수법으로 법안 처리를 질질 끌고 있다. 위원 추천을 해달라는 요구에 박대출 간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신상진 위원장은 "간사간 협의가 안되는데, 안전조정위 구성을 하기는 어렵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위원장의 계속된 회의 진행 요구 묵살에 야당은 16일 자체적으로 상임위 회의를 열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7차례나 전체 회의 요구를 무시하던 신상진 위원장이 갑자기 나타나 "자유한국당이 안전조정위 위원을 추천하면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의 일방 처리 조건이 된다"면서 안전조정위 추천을 거부하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국회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며 법안의 심사조차 막고 있는 것이다.

방송장악 저지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인식은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드러난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기존의 방송계를 흔들며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어디선가 본 듯하다. 방송장악 저지법에 대한 MBC 경영진의 입장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개정안은 사실상 6대3으로 돼있는 현재의 이사진 구성을 7대6으로 바꾸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어느 한 쪽의 입김이 약해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것을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 바로 자신들이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면 옳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백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I 2월 국회 통과도 불투명

시간끌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방송장악 저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 일단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 여권은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들의 의도는 명백해 보인다. 설사 탄핵이 결정되고 대선에서 집권에 실패하더라도, 박근혜 체제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MBC, KBS를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MBC는 새로 사장이 선임되면 임기 3년, KBS의 고대영 사장은 임기 1년9개월이 남아있다.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신상진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내고,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앞선 과정을 뒤집어 보면 야당 역시 반년 이상 법안 통과를 위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대선주자들과 원내 대표에게 애초부터 방송장악을 막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언론이 권력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이렇게 심각한 국정농단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를 잊어서는 안된다. 현정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언론장악 방지는 무엇보다 긴급한 과제이다. 만약 야당이 정권 교체가 눈앞에 온 것처럼 여겨, 시간만 지나면 현재의 6대3 구조가 자신들의 손으로 돌아온다고 계산하고 있다면,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I KBS 양대 노조 총파업 결의

시간이 지날수록 여야 모두 현재의 방송관련법을 유지하고 싶은 유혹에서 빠져나오기는 더 힘들어진다. 이에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들도 2월 임시 국회에서 방송장악 저지법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점점 본격화하고 있다. KBS 양대노조는 '방송법 개정과 공정방송 사수, 단체협약 재취를 위한 총파업' 투표를 83%의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바로 자기 자신들을 개혁대상으로 삼고 있는 방송장악 저지법이 논의되는 와중에도 MBC 사장 선임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방문진에 대한 규탄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MBC 사장 선임일로 예정된 23일을 전후해 대규모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민실위 선정 2016년 11~12월 좋은 리포트상 수상작

11월

뉴스데스크(울산) 순직경찰 위로금이 식당으로?



울산지부 **최지호 이용주 전상범** 조합원

울산 울주경찰서가 순직한 경찰관에 대한 위로금을 관내 기업체로부터 몰래 모금하고, 회계상으로도 불투명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해 <뉴스데스크>를 통해 단독 보도함.

11월

시사매거진2580 'K성형외과 무더기 특혜의 비밀'



서울지부 **권희진 송록필** 조합원

박근혜 대통령 비선의료진이었던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수술용 실 개발에 산업자원부가 15억원 규모의 연구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시사매거진2580>을 통해 단독 보도함.

12월

뉴스데스크(대전) '타이어뱅크 수백억 탈세' 단독보도



대전지부 **고병권 조명아 이승섭 양철규** 조합원

대전지역 중견기업인 타이어뱅크가 수백억 원 탈세 혐의로 대전 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해 <뉴스데스크>를 통해 단독 보도함.

이용마 기자
쾌유를 기원하는
응원게좌

하나은행 850-910016-27704
예금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재건 MBC' 2017년 조합원의 다짐

서울지부 이현석 조합원

우린 '그 사람' 을 가졌다



언론의 위기인지, 경영의 위기인지, 산업의 위기인지 우리를 조여오는 위기의 본질조차 합의되지 않은 채 많은 동료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진리탐구보다 진영논리가, 내면의 성찰보다 자기합리화가 편리한 시절을 겪다보니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 모두가 MBC 위기를 말하기에 더 혼란스럽습니다. 혹시 '우리'와 '그들' 사이에 단 하나의 차이만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을 가졌는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2기 집행부 출범과 함께 슬픔, 분노, 증오, 좌절을 넘어 오로지 국민의 방송에 집중하는 '그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 MBC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中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서울지부 한재희 조합원

'MBC다음' 의 세포 일깨울 때



최근 후배 한명이 휴직을 신청했다. 몸이 아파 쉬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아팠던 것임을, 모두들 뒤늦게야 알았다. 지난해에도 울면서 짐을 싣 후배가 있었다. 흔한 일이다. 자의 반 타의반 떠나가는 동료의 모습, 누구 누구가 사표쓴다는 소문, 그리고 이어지는 저마다의 침묵. MBC의 익숙한 일상이었다.

사실,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MBC의 초라한 민낯이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MBC에서 월급받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세월호가 방송 금기어가 되고 위안부 합의가 비판의 사각지대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린 저항할 수 없었

답니다' 라고 누가 어떤 근거로 촛불시민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시민들이 MBC에 등을 돌리고 다른 언론을 선택한 지금, 더 이상 우린 광장에 나가 MBC를 지켜달라 고 손을 내밀 수 없게 되었다. 오로지 스스로 일어서는 수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날카로운 눈으로 돌아보려고 제안하고 싶다. 긴 침묵과 타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신념과 가치관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복종과 타율의 시스템이 강요되는 동안 자율성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았는지. 배제와 차별과 알뜰한 이익들로 역인 사내정치 속에서 각자의 내면에 이해타산과 편가르기가 자리잡기 시작한 건 아닌지. 아직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 믿는 'MBC다음'의 세포들을 이젠 꺼내보았으면 한다. 거창한 얘기가 아니다. 나의 양심과 나의 양식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부딪혀 가며 일하는 것일 뿐이다. 사실, 한때 우리가 일해왔던 방식이다. MBC는 그런 조직이었다. 진취적으로 생각하려 했고 도전적으로 움직이려 했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 이동하려 했다. 지금의 MBC는 그 MBC에서, 멀어도 너무 멀리 와 버렸다. 어쩌면 큰 싸움을 피할 수 없고 그래서 또 다치는 사람이 생길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길을 돌려놓지 않으면 이 회사에 미래는 없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이 길을 되돌려 'MBC다음'을 되찾기 시작하면, 떠나간 시민의 믿음도, 동료의 상처받은 마음도, 잃어버린 우리의 자존도 결국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아직 믿고 있다.

강원영동지부 김재욱 조합원

작지만 강한 촛불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찌는 체질이었던 저는 30살까지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이후로 지금까지 체중이 30kg 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늦기 전에 식이요법, 운동, 생활습관 변화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체질 개선에 힘써볼 생각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MBC의 체질도 안 좋은 쪽으로 변화했습니다.

처절하게 싸웠지만 결국 이기지 못했습니다. 좌절과 두려움, 무기력증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외면한 채, 편하고 쉬운 것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들을 미디어 공론장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민주주의

의 후퇴와 민중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MBC 방송강령에서 명시하고 있듯,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정의와 민주질서를 옹호하며, 불편부당한 공정방송에 힘써야 합니다. 공권력에 의해 사람들이 상처 받고 마음 아파할 때, 비이성적인 정치질서와 사회 구조 속에서 약자들이 고통 받을 때, 해직언론인 선배들이 힘겹게 투쟁하고 있을 때, 내가 쓰러지지 않으니 애써 외면하고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을 만들어 국민에게 사랑 받던 마봉춘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제12대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에 바랍니다. 우리 앞에 햇살을 밝혀 주십시오. 작지만 꺼지지 않는 촛불로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지부 한임경 조합원

소통과 자율의 회복 절실하다



고단하다. 고단한 일상이 누적됐다. 그 어떤 희망도 바람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회사와 집을 오가며 그냥 직장인으로 살았다. 조직은 어떠한 소통도 없는 죽은 조직이었다. 비상식적인 언어들만 난무하고, 때론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자주 벌어졌다. 그래도 조용히 지켜보며 죽은 듯이 지냈다. 변화의 바람은 갑자기 찾아왔고, 사람들은 거리로 나가 촛불을 들었다. 우리 조직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내 자진조차 MBC뉴스를 외면했기에 얼굴도, 이름도 몰랐던 보도국 막내들이 시청자들을 향한 반성문을 올린 것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乘槎浮海 端風時吹 (승사부해 단풍시취). 뗏목을 타고 바다로 행하니 좋은 바람이 때때로 분다. 모 후배가 이런 말을 했다. "선배, 제가 신입사원 때예요. 선배 한 분이 점심 먹고 한강에 가지고 하더라고요. 자전거를 대어하고 한강변을 누비고 돌아와서 녹화를 했던 말이에요. 그 때는 몰랐어요. 그때 우리 회사가 바로 구글이었는데 말이에요. 구글이 우리 회사를 벤치마킹했었는데 말이에요." 엄격한 규율이 아니라 자율적인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직,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해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지혜 또한 많음을 인정해주고, 그런 이유로 타부서로 함부로 전출시키지 않는 조직, 그리하여 자신의 일과 삶을 사랑하고 애사심 등은 구성원들이 넘쳐나는 조직으로 이제는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변화의 중심에 노동조합이 굳건하게 서 있기를 바란다. 우리 노동조합의 12기 집행부는 잘 해낼 거라 믿는다.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신뢰와 지원을 보낸다.

회사가 지난 주말 대규모 일반직 경력사원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편성·제작·보도·경영·기술 등 전 부문이 망라돼 있다. 신규 채용 인원은 40여 명, 기존 계약직 사원의 일반직 전환까지 합치면 무려 6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아나운서와 예능·드라마 조연출 등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지난 2012년 파업 이후 최대규모의 채용이다.

MBC는 콘텐츠 중심의 미디어그룹을 표방하고 있다.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는 방송사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다. MBC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력 채용에 가장 큰 공을 들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지켜온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김재철, 안광환 체제에서 이 절차는 완전히 붕괴됐다. 이번 채용 역시 졸속, 주먹구구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안팎의 비판을 무시하며 차기 사장 선임을 밀어붙이고 있다. 회사의 경영진 교체를 앞두고 난데없이 엄청난 규모의 채용을 강행하고 있다. 인력 수급 조사는 단 며칠 만에 졸속으로 진행됐다. 심지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했는데도, 무조건 인력을 채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부서들도 있다. 이 같은 기형적 졸속 채용의 속셈은 무엇인가?

현재 MBC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넘쳐난다. 회사는 지난 2012년 공정방송을 위한 노동조합의 파업 이후 무려 200명이 넘는 직원들을 원래 직종과 상관없는 이른바 '유배지'로 쫓아냈다. 현재 도기자 55명, PD 32명, 아나운서 11명 등 총 109명이 유배 상태에 있다. 법원이 잇따라 부당전보 판결을 내렸지만, 현 경영진은 법원 판결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그 빈자리는 대체 인력으로 채워 넣었다. 2012년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보도국의 시용 기자와 경력기자를 대거 투입했다. 합병 파업에 대해 인력을 투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후

성명서

대규모 밀실· 졸속 채용을 취소하라

**MBC, 박근혜 체제 몰락 직전 또 대규모 인력 채용 강행
공영방송 파괴와 박근혜 체제 3년 연장을 위한 '최후의 저항'**

5년간 채용된 일반직만 무려 250여 명에 달한다. 경영진은 이들을 보도와 시사교양, 경영 부문의 주요 부서에 집중 배치했다.

MBC의 공채 전형은 원래 공정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했다. 필기시험과 세 차례에 걸친 다층 면접 과정을 거쳤고, 전 과정은 인사부뿐만 아니라 현업 구성원들이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5년 사이 이 같은 원칙은 붕괴됐다. 채용은 철저한 비밀주의를 고수하며 임원진과 극소수의 담당자들이 밀어붙이고 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채용하는지 극소수 경영진 등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면접 과정에서는 사상 검증이 횡행했다. 경영진은 '당신은 보수냐, 진보냐',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버젓이 던졌다.

'녹취록 파문'의 당사자인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은 "인사검증을 한답시고 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봤다"고 실토했다. 공영방송의 채용에서 반사회적 '지역 차별'이 자행됐음을 자백한 것이다. 과연 이러한 채용 과정을 통해 MBC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들을 뽑을 수 있는가? 현재의 MBC는 거대한 파놉티콘으로 전락했다. 자기 검열과 침묵만이 흐르고 있다.

최근 MBC는 경영진의 뉴스 사유화로 전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본질과 거리가 멀다고 이미 밝힌, 이른바 '고영태 녹취록'을 침소봉대하며 탄핵 기각에 목숨을 건 것처럼 보인다. 방문진이 낙점한 임기 3년의 차기 사장 최종 후보 3인, 권재홍·김장겸·문철호는 하나같이 MBC를 파괴한 주범들이다. 최후가 임박한 박근혜 체제의 생명을 어떻게든 연장하고, 설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앞으로 3년 간 MBC를 극소수 극우 세력과 박근혜 체제의 보루로 삼아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MBC 구성원들과 노동조합은 시청자와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방문진과 현 경영진은 박근혜 체제를 연장하겠다는 망상을 버려라. 탄핵당한 대통령의 보위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을 더 이상 파괴하지 말라. 이번 대규모 졸속, 밀실 채용은 극소수 박근혜 잔당과 현 경영진의 마지막 저항일 뿐이다. 밀실, 졸속 채용을 즉각 취소하라. 해직자와 부당전보 대상자들을 복귀시키라는 법원의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방문진은 박근혜 체제 연장책인 MBC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

2017년 2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속보] 방문진이 MBC 사장 후보 확정

(권재홍·김장겸·문철호)

[문제] 사장 후보 3인 = 언론장악부역자

세월호 유가족들 '깡패'로 폄하하고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왜곡보도 지시

[일정] 2월 23일(목) 방문진 이사회에서 선임

 **[행동1] 'MBC를 국민의 품으로' 소리치기**
23일 1시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관 앞에 모여서

 **[행동2] 'MBC를 국민의 품으로' 소리치기**
23일 18시 30분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MBC구성원들과 함께

**안돼!
언론장악!**



[꿀정보]

여의도·상암동에 포켓스탑 많아요

부역언론인 잡고 포켓몬고 합업!

희귀포켓몬도 많아요



문의 : 02-739-7285

주최 :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 MBC를국민의품으로공동대책위원회